2010.12.15 No.89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경제영토’ 세계 1위
FTA 허브 대한민국 p29~51

서해5도 군사 요새화 추진한다 p10~11

법원, 한강·낙동강살리기 사업 타당성·효과 인정 p20~25



컬링은 19.96kg의 스톤을 하우스라는 원에 정확히 밀어 넣는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컬링의 스톤은 19.96kg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세상의 시선과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무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 은메달, 이들이 움직인 스톤에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더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성과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인간승리의 드라마**입니다.

12월 12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저우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300명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눈앞에 다가온 더 큰 이익 한미 FTA 발효 앞당겨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어낸 것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 2~4년 연장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신규 도입, 한국으로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물론 정치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내년 초 상정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도 얻을 것은 얻었다.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를 2년 연장했고,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의 유예 기간도 당초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갱신 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미국이 거론했던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철폐 요구는 검역 문제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우리의 일관된 논리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추가협상 결과가 한미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춘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동차에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챙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부 얻은 것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서명까지 끝난 결과를 가지고 추가협상을 벌여 기존 합의를 수정하게 된 것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계기로 서명 이후 3년 5개월 동안 표류하던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이번 추가협상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우에 따라 한미 FTA 자체가 영원히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2007년 당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4억6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와 6퍼센트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따라서 추가협상 결과를 단순히 추가협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전체의 발효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발효가 앞당겨진다면 이는 자동차에서의 일부 관세 철폐 시기 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협상을 통해 조금 잃긴 했지만 대신 한미 FTA 발효를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미국 의회보다는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가 조기 비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Weekly
2010.12.15
No.89(통권 190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한·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의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2.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대한민국, 세계 최대 경제영토 확보했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으로, 그리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나라가 부강해지니 국제적 위상도 올랐다. 지난 11월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흥국 최초로 의장국이 됐다. 신흥국 리더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더 넓은 경제영토, 더욱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8호(12월 8일자) 기획특집 '블랙골드 지고 블루골드 뜬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1세기 블루골드 시대 현명히 대비하길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여 년 후에는 물값이 원유값보다 비싸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라니 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 산업을 육성하고 수자원 기술을 수출해 21세기 블루골드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_최성열

"'농업 발전의 힘 수자원 기술, 해외로' 기사를 읽고 우리 수자원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 기술을 이전하고 전수할 단계의 수준이라니 경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 국가에서는 물이 필수자원이므로 우리의 간척사업과 농촌 개발 기술 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수자원 기술을 다각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_최남이

88호 '서울 G20 정상회의 / 5대 정책 분야, 서울 액션플랜 성공적 발표'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로 재정, 통화, 환율 등 5대 정책 분야에 '서울 액션플랜'을 성공적으로 발표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녹색성장 분야가 각국의 정책 공약에 반영된 것은 G20 정상회의가 진일보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이젠 서울 액션플랜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시대의 리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_이순호

88호 '포토 뉴스 / 서해를 지켜라'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군과 연평도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젠 대통령의 담화에서처럼 온 국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 다시는 북한이 도발이나 침략행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_오주형

88호 '화제의 인물 / '불타는 철모' 연평도 포병 7중대 임준영 상병'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철모가 불에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임무를 수행한 임 상병의 용기와 투철한 군인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생사가 달린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났을까요.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사격으로 적에 맞선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젊은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온 국민은 든든하답니다." _김종수





알립니다

‘e-브리핑’ 개설 기념 이벤트



대한민국의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브리핑’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앞으로 각 부처의 정책 발표나 장·차관 브리핑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이 e-브리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칭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2월 18일까지
참여 방법 | e-브리핑 홈페이지에서 e-브리핑 애칭과 오픈 기념 축하 메시지, 바라는 점을 등록. 페이스북 ‘좋아요’나 트위터 ‘팔로잉’하는 이벤트도 참여 가능
수상자 발표 | 12월 24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시상 내용 | 태블릿PC(1명), 도너츠 6천원 교환권(50명), 커피 교환권(1백명) 등

문화체육관광부 ☎ 02-3704-9090 briefing.go.kr

외교·통상 알리는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면서 외교·통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창조적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에 앞장서는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통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접수 기간 | 12월 21일까지
지원 방법 |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e메일(blogreporters@mofat.go.kr)로 지원. 외교·통상에 관한 자유 주제로 A4 1장 내외 기사로 작성해 첨부
결과 발표 | 12월 23일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30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예정
활동 내용 및 혜택 | 2011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외교통상부 블로그에 수록할 콘텐츠 생산. 기사 작성 위한 취재 지원비 지원.

외교통상부 ☎ 02-2100-7500 mofat.go.kr
블로그 blog.naver.com/ilovemofat blog.daum.net/ilovemofat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2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산 OOO 수입 확대 문제 논의를 요구해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4.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5. 정성으로 내는 돈이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불우이웃을 도와달라며 OO을 기탁했다.”
6. 부부로서의 짝. “나이 든 총각이 참한 여인을 OO로 맞이했다.”
8.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내리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하죠.

세 로

2.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은 돈.
3. 재물이 계속 나온다는 보물단지죠. 전영택의 단편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5. 오랑우탄을 이렇게도 불렀죠.
6. 갑절. 몇 배로 늘어남. 몇 배로 늘림.
7. 야구나 육상경기, 골프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경기장이나 잔디밭을 가리키는 말.

〈Weekly 공감〉 87호(12월 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조물주 4 인산인해 6 연장 7 호평 9 도무지
세로 1 샘물 3 주인장 5 해병 6 연평도 8 저지

〈Weekly 공감〉 8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언식·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원로
권기옥·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손혜진·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조중연·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하상금·대구 달서구 월성동

※ 86호 ‘공감 퍼즐’ 정답 중 가로 3번, 세로 3번의 정답을 ‘마차’와 ‘마고자’로 바로잡습니다.

"소통하는 나라, 선진 대한민국"

김정운 명지대 교수


동아DB

만지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드러난 뇌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세포와 피부로 나오는 세포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뇌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만져주면 뇌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어렸을 때 만져주는 것이 인지·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웃기기 전에 몸짓, 손짓, 표정으로 상대와 정서적 공유를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표정을 지을 때 "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는 여자는 무조건 예뻐 보입니다. 즉 정서 공유가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서 공유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서 공유는 어떻게 할까요? 정서 공유를 위한 첫 번째 기술은 순서를 주고받는 'Turn Taking'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순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반응을 보여주셔야 하지요.
두 번째는 남의 처지에서 세상을 보는 'Perspective Taking' 입니다. 아이는 네 살 때부터 내가 보는 세상과 남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상하게도 네 살에 생기는 관점전환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없음에도 자기 스스로 말하는 'Egocentric Speech' 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화나면, 창피하면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내가 힘드니까 이야기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성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제의, 축제, 행사를 뜻하는 'Ritual'입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위대한 리추얼이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아버지 세대는 새벽만 되면 잘살아보려고 가슴이 벅차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리추얼이 의미를 부여해줬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뛰어넘으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위기는 바로 리추얼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추얼의 시작은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면 재미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통찰을 얻고 가슴 벅참이 만들어져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동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 '화제의 인물 / '불타는 철모' 연평도 포병 7중대 임준영 상병'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적의 도발에 맞서 대응사격을 하느라 철모와 턱끈이 타는 줄도 모르고 임무를 수행한 그의 용기와 투철한 군인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같은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는 한 적들은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블랙골드 지고 블루골드 뜬다'는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봅니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40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려야 한다는 예측이 남의 이야기로 치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물 아껴 쓰기, 수자원 청정관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은 머지않아 블루골드를 뛰어넘어 '블루다이아몬드'가 될 테니까요.

3. 훈훈한 휴먼스토리를 발굴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동

1. 중점기획으로 다룬 한국 농업기술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빈곤의 위기를 녹색혁명을 통해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에서 얻은 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자원 공동개발에 참여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2. 기획특집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 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계획적인 물 관리, 수자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부터 물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야겠습니다.

3.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미담, 나눔의 현장을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5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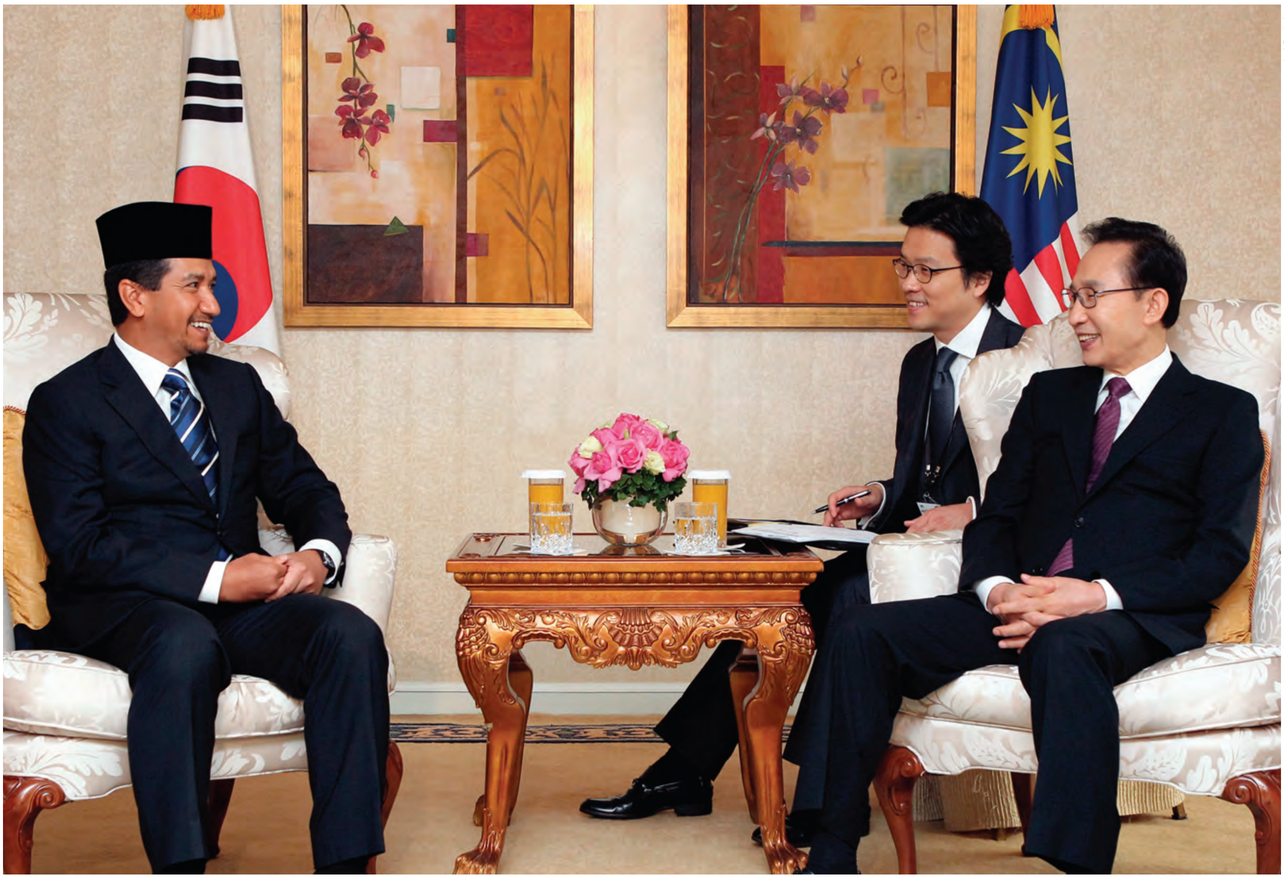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한국, FTA 허브 국가로 도약'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0일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을 면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1박4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신아시아 외교 모멘텀 지속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유례없는 '1박4일'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이번 순방은 인도네시아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 주재하고,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위한 것. 당초 3박4일이었던 일정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 전체가 비상체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폭 축소됐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이번 순방 일정은 12월 8일 자정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 주재하기 위해 12월 9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를 12월 9, 10일 국빈 방문했다.

두 나라 순방을 위해 이 대통령이 12월 8일 자정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11일 새벽 귀국하기까지 숨 가쁜 해외순방 일정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12월 8일 오전 출국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순방하고 11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평도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용기에서 이틀 밤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주 파트너로 참여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인도네시아를 찾은 12월 9일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주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리민주주의포럼 공동 주재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발리민주주의포럼 개최 등 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번 포럼의 공동 주재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심화 발전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면서 올해 양국 교역이 역대 최고인 2백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을 평가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정보통신, 전력, 철강,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및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으며,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발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소개하며 "민주주의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갖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오전 나집 툰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발전상을 평가하고,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정상회담 후 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 공조조약 서명식도 개최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말레이시아 경제인 환담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어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라 12월 11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평 확대

청와대는 한때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화산 폭발과 지진 등 잇단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말레이시아와는 올해가 수교 5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의 해외체류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12월 9일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기 위해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며 "내일 회의를 하고 국빈만찬을 끝내고 가면 한국에 새벽에 도착한다. 정확하게 따지면 1박4일, 호텔비는 많이 벌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발리민주주의포럼 공동 주재가 아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지역의 모범적 민주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한층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아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 진출, 방위산업 등 분야의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2005년 12월 이후 최초의 우리 정상 방문으로서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동남아지역의 선발주자인 말레이시아와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진정한 우방으로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모멘텀을 지속 확대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아세안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G

글·박경아 기자

"지금 우리 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

강군 위한 軍 개혁, 해병대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추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을 강군(强軍)으로 만들 군 개혁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부터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받고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밝혔다. 또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는 서해5도에 대해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동아DB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자행된 이후 방위태세 강화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평도.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12월 4일 취임식 직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한 여러 가지 국방개혁 방안을 현실적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남파됐다 자수한 김신조 목사의 말을 예로 든 이 대통령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며 '군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적의 경비로 현재의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며 미래의 안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 구현'을 목표로 한 71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신력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우선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사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나라 영토 어디에라도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5도의 방위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 때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


동아DB

1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의에서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사령부' 신설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기간을 기존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방선진화추진위, '서해5도사령부' 신설 건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제5의 전장'이라고 하는 사이버 심리전 공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의 제안 과제 가운데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재 잠정적으로 21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변동돼 있을 뿐 달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재로 12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해5도 예비비 지급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서해5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12월 8일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전력은 그동안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정규전 대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왔지만, 이날 양국 합참의장협의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도 한미동맹과 연합전력 차원에서 대처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 전투기 대응 등 우리 정부의 자위권 해석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명했다.

멀린 의장은 또 "대응 수단은 바로 대한민국에 권리가 있다"며 "도발 시 우리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북한 도발 시)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공정한 글로벌 사회, 국제적 연대 필요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정사회와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올해 우리 사회를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공정'과 '정의'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목에 서 있고, 그에 필요한 자질로 공정과 정의를 꼽았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12월 7일 서울에서 개최한 '공정사회와 글로벌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는 공정과 정의 문제를 국제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서 성찰하는 자리였다.



동아DB

12월 7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로 서울 광장구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공정사회와 글로벌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 출발선은 인간의 존엄성이 돼야 한다."(루드거 큔하르트 독일 본대학 정치사회학과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문화 혁신으로 이어져야 진정성을 획득한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루드거 큔하르트 독일 본대학 정치사회학과 교수, 제럴드 하이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상임고문,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등 7명의 발표자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까지 모두 9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계화시대에 국제사회에서 공정이 갖는 의미, 기업과 공정사회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은 1백여 명의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일 이어졌다.

"공정한 사회 구축 위해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유럽통합 문제 전문가인 루드거 큔하르트 교수는 컨퍼런스 주제와 같은 '공정한 사회와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구촌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공정한 글로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회의 예외성 주장 지양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고의 확대 ▲자유와 정의에 비해 소홀한 국제적 연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세계화라는 '과정'을 넘어 이미 세계성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사회가 일시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라는 '구조'를 갖췄다"며 "이런 시점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의 보편적 지침이자 조직원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11월 북한의 도발(연평도 포격)에 대해 남한이 보여준 자제는 도덕적 리더십의 설득력 있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공정한 사회의 구축에서 기업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논의의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요시다카 오카다 일본 상지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이익 창출자'에서 '가치 창출자'로 바뀌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모델이 고령화, 환경오염, 물·식량 부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가치 창출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윤여선 교수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CSR를 비용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은 사회적 영향과 비즈니스 영향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사회투자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준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협력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3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인류의 공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질서와 윤리로서의 공정과 정의, 승자가 독식하지 않으면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정과 정의, 교육 기회 균등을 통해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주는 공정과 정의"라고 강조했다. G

글·허진석(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제럴드 하이만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

민주적인 절차, 공정한 사회의 필수조건

"사람들이 공정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자녀들의 교육 기회다.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사회의 불평등이 계속된다고 여긴다."

12월 7일 국제 컨퍼런스 현장에서 만난 제럴드 하이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상임고문 겸 힐스 거버넌스 프로그램 책임자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성의 분야로 교육 기회를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조세와 사법절차의 공정성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조세 평등을 통해 공정성을 추구하는 문제를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 평등과 인센티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1백 퍼센트 공정하기 위해 1백 퍼센트의 세금을 매긴다면 1백 퍼센트 비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지요. 그 균형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은 물론이고 한 사회 안에서도 공정이나 정의를 가늠하는 기준의 합일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하이만 고문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권을 공통분모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사회마다 가치관에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권력에 의해 잡혀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나 분노하게 되는데 이런 것부터 공정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공정과 정의를 위해 교육 기회나 조세, 사법절차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라며 "사회 주체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하이만 상임고문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버지니아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국가와 기업의 거버넌스(국정관리체계)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다.



동아DB

제럴드 하이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본권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이정표’ 한국 리더십 발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해 금융기관 규제방안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회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과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했고, 신흥국의 금융안정을 위한 외환리스크 관리, 신흥국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역량 강화 등 중요한 이슈를 G20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유영준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금융규제개혁과장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간 네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해온 기존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G20가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즉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G20의 역할을 ‘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에서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기존 과제의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G20가 그간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Basel Ⅲ)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G20 정상들 “금융규제 개혁, G20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

이러한 규제개혁 조치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이를 좀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납



동아DB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에는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환율 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국제공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세자와 일반 국민들이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20 정상들은 이런 성과를 두고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들이 마련됐다"고 선언했으며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그간 G20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개혁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설득하고 신속한 개혁 추진에 대한 G20 차원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각국 재무장관들 그리고 금융규제 분야의 양대 국제기준 제정기구라 할 수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수장들은 Basel III 은행 규제 체계를 비롯한 금융개혁 과제들이 시한 내에 마무리되는 데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그동안 G20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던 과제들을 발굴해 서울 정상회의 이후 G20 금융개혁 논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외환리스크 관리나 신흥국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신흥국의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한 이슈들을 G20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9월 G20 국가와 50여 개 신흥국을 서울로 초청해 '신흥국 금융 컨퍼런스'를 열어 신흥국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작업계획을 제시하며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한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신흥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외환리스크 관리와 다국적 금융기관 규제 문제 등을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소 소외돼왔던 이 문제에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신흥국 금융안정 논의 본격화하기로

아울러 이러한 의제 설정은 G20가 G20 국가들이나 일부 선진국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으로서, '위기 이후 동반성장'이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토를 잘 살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회의'라는 대내외의 평가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금융의 전 부분에 걸쳐 다수의 국제기준과 원칙들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 과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과제를 철저히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지난 2년간 G20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전문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G

공방 끝에 얻은 'IMF 신흥국 쿼터 확대'

IMF 개혁방안, 65년 역사상 가장 포괄적·획기적 방안 평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중국, 브라질 등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6퍼센트 이상 쿼터를 이전하고, 유럽국가의 이사를 2명 축소해 신흥개도국으로 돌려 신흥국의 영향력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쿼터와 순위도 1.4퍼센트에서 1.8퍼센트, 18위에서 16위로 격상됐다.



박정훈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기구개혁과장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과제 중 하나는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논의의 초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및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특히 IMF 개혁은 이번 정상회의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이행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돼 있는 등 G20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큰 주제였다. 참고로 IMF의 쿼터는 일반 회사의 지분과 유사하나 쿼터 규모에 따라 투표권, 대출 규모 등이 결정된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 특히 IMF가 위기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IMF의 쿼터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최소 5퍼센트 쿼터 이전 및 이사회 개혁 검토 등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혁 과제에 합의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론적 합의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G20 내 논의 과정에서 정상선언문의 문구가 국가별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소 5퍼센트 쿼터 이전'의 경우 신흥국은 그 취지를 감안할 때 7퍼센트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선진국은 5퍼센트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쿼터를 양보하고 어느 국가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쿼터 이외의 다른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됐다. 지난 1월부터 IMF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G20 국가 대표자들이 모인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의 논의는 많은 경우 언쟁으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패키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신흥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IMF 설립 이후 최대인 현행 대비 100% 쿼터 증액 합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보면, 먼저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6퍼센트 이상 쿼터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10위권 이내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쿼터가 4퍼센트에서 6.4퍼센트로 증가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상승했다. 또 IMF 설립 이후 최대인 현행 대비 1백 퍼센트의 쿼터 증액에 합의했다. 약 3천8백억 달러에서 약 7천6백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사회 개혁 측면에서는 또 다른 큰 성과가 있었다. 이사회 규모는 현행 24명을 유지하되, 이번 쿼터 개혁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이사 선출 때 선진 유럽국가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명을 축소해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개도국의 이사가 2명 증가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IMF 및 주요국의 입장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울 G20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이뤄내기까지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했다.
사진은 G20 정상들이 발표할 성명서 초안 작업을 하는 G20 재무차관들.

정상회의 이후인 내년 1월로 돼 있던 IMF 개혁 시한을 우리 주도로 이번 정상회의로 앞당겼다. 이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시기에는 미국, 유럽, 중국, 브라질 등을 직접 방문해 타협과 양보의 필요성을 설득해나갔다.

주요국 입장을 반영해 타협이 가능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최종 합의안은 우리나라의 중재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 타협의 순간에는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주선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합의된 IMF 개혁방안은 IMF 65년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수행한 리더십에 대해 IMF 및 해외 언론들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선진·신흥국 연결하는 가교 역할 해야"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국내 및 세계경제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먼저,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쿼터 및 순위 상승(1.4퍼센트에서 1.8퍼센트, 18위에서 16위)으로 1백87개 글로벌 멤버십을 가진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쿼터 비중 증가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다.

세계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치우친 지배구조로 비판받던 IMF가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정당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IMF가 국제금융 안정 및 세계경제 성장의 안정적 지원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이번에 재원이 증액됨으로써 IMF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앞으로 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괄하는 국제통화체제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IMF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지난 6월 세계은행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마무리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맞게 꾸준히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논의에서 우리나라에게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의장국이 아니지만 전임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쿼터 및 지분이 늘어난 만큼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G

'설득 또 설득'으로 이뤄낸 글로벌 금융안전망

건전재정 도산 막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성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며 이뤄낸 '1백 퍼센트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로 대외개방도가 높고 국제결제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외부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더 큰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별국가를 넘어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류상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의제기획과장

서울 G20 정상회의는 여러 의제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개발' 의제와 함께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하고,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며 이뤄낸 '1백 퍼센트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외개방도가 높고 국제결제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건실한 국내 경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시장 부실화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문제로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보호막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건전한 국가들이 자기 책임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더 큰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기업에 비유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갑작스러운 현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 의제를 제안했을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문제 있는 국가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의제로 오해했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

올해 초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을 천명한 후 우리나라는 G20 내에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영국과 공동의장을 맡았다. 또 사무관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급 담당자들이 주요국 파트너를 만나고 설득했다. 아울러 제기되는 모든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학계, 언론계 등 국제금융계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일일이 보내며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키로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선제적 자금 지원으로 위기 예방

그 후에도 난관은 많았다.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는 쟁점별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었다. 재원 조성에 많이 기여해야 하는 국가들은 엄격한 조건을 붙여 지원하기를 원했고 잠재적인 수혜국가들은 가능한 한 조건 없이 지원받기를 원했다.

선진국들은 일부 신흥국들의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신흥국들은 금융안전망 논의가 외환보유고 축소 논의로 연결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양측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중재안을 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 8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방적 신용라인 개설제도를 개선하는 첫 단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존 IMF 대출제도는 각국 내부 문제로 야기된 위기

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설계됐다.

위기의 원인을 해결한다는 논리로 구조조정 등 가혹한 조건이 붙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는 한 IMF 자금을 지원받기를 꺼려했다. IMF 자금을 쓰는 데 따른 '낙인효과' 때문이었다.

따라서 건전한 국가들이 위기 징후에 노출될 경우 선제적으로 신용라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했다. 이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IMF의 임무와 역할을 '사후 위기 해결' 중심에서 '사전 위기 예방' 쪽으로 재정립해나가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다.

예방대출제도 신설로 금융안전망 수혜국 대폭 확대

이런 맥락에서 우선 런던 G20 정상회의 때 엄격한 자격 테스트를 통과하는 우량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탄력대출제도(FCL)의 대출 한도(각국 IMF 지분의 10배)를 폐지하고 자금 인출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안전망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탄력대출제도의 자격 요건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건전한 국가들을 위한 예방대출제도(PCL)도 신설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의 수혜국을 대폭 확대했다. 예방대출제도는 개방정책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많은 신흥개도국들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의 이해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위기상황에 노출된 다수 국가들에게 동시에 탄력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IMF 대출의 낙인효과 때문에 먼저 자금 지원을 신청하기를 꺼려해 위기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큰 규모의 위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논의해야 할 과제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전 세계적 규모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좀 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 안전망들의 위기 예방 기능을 발전시키고 IMF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가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G20 내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안전망 의제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서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는 지금 당장은 큰 배의 방향타를 약간 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훗날 새로운 목적지를 지향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초로 평가받을 것이다. G



AFP

우리나라는 대외개방도가 높고 국제결제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건실한 국내 경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문제로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위기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안해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한강살리기 사업, 법적 하자 없다"

서울행정법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원고 패소판결



한강살리기 사업이 한강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한강종합개발 사업에서 얻어진 성과의 연장선에서 예측해볼 수 있다. 잠실대교 부근 어도(魚道)의 모습.

4대강살리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4대강 수계별로는 처음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으로 금강·영산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규모가 큰 두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림으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4-4-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가 12월 3일 한강살리기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내린 판결 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기다. 한강살리기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4가지 사업 과정의 적법성, 4가지 사업 효과, 그리고 생태계 악영향 논란 모두 사업자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경모 씨 등 6천1백29명의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1년간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홍수 위험 증가,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며 법원에 공사 시행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 설치·준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사업이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으로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의 큰 틀인 법령 위반과 사업의 정당성 부분을 나눠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강살리기 사업 초기 과정에서 보(洑) 및 준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원고 측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 설치 및 준설은 '재해 예방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 설치로 인한 홍수 위험 등 안전성에도 큰 문제 없다"

하천공사 역시 적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고시 당시 실시설계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실시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자 측이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목적과 공기업적 성질에 반하고, 사업 시행 시 지자체 단체장과도 협의가 없었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입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비춰 한강살리기 사업이 공사의 사업 목적 외의 하천공사라 할 수 없고, 공기업적 성질에 반하지 않으며 자자체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

변론기일별 주요 심리 내용

2010.3
1차 수질 악화, 보 안전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2010.7
2차 1차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중심의 쟁점 공방
3차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2010.9
4차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2010.10
5차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쟁점 공방
6차 국가재정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주장 등에 대해 쟁점 공방
7차 최후변론. 원고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힘. 기피신청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

주요 판결 내용

쟁점	재판부 결정	판단 이유
보, 준설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적법 여부	적법	•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 절차. 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음 • 보 설치, 준설은 '재해예방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속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하천공사 시행	적법	•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침. 실시설계도 역시 작성해 절차상 하자 없음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	적법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 의견 반영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말할 수 없음
문화재 조사	적법	•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육상 및 수중 지표조사 실시
홍수 예방 효과	인정	•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홍수위 낮아짐. 지류인 섬강의 홍수위도 상류는 11미터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 보 구조물 및 치수 안전성에 문제 없음
용수 확보	인정	•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기상 특성을 고려해 본류에 용수를 확보하면서 지류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정당함
수질 개선 효과	인정	• 보 설치로 물 체류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영영화 현상을 단정할 수는 없음 • 총인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 개선대책으로 오히려 수질 개선 여지가 높음
일자리 등 경제효과	인정	• 정부, 지역업체 참여 위한 방안 수립. 실제 상당수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 • 17개 세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시행은 적절
생태계 악영향	없음	•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한강종합개발사업 등에서도 사업 이전에 비해 생물 다양성 늘어남 • 샛강과 자연형 어도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이상 생태계 파괴를 단정할 수 없음



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지자체 및 주민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했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변경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되풀이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보호법 준수 여부 역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육상 및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사업의 효과도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먼저 보 설치로 본류가 범람하고 지류의 홍수 위험이 초래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홍수위(하천의 수위 중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 수위. 배수계획이나 치수공사의 계획을 세울 때에 기준이 됨)가 낮아지고, 지류인 섬강의 홍수위도 상류는 11미터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치 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르더라도 보 구조물 및 치수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수 확보 측면에서도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기상 특성과 본류에 용수를 확보해 지류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한강살리기 사업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컸던 수질 악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원고 측은 그간 "준설, 제방고 증설, 보 건설 등의 사업으로 자연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유속이 느려져 현재보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을 가둔다는 이유만으로 수질 악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 경우에도 유기물질이 자연분해되거나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질 악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은 빛, 온도, 영양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의 설치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부영영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엔 총인처리시설의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 개선대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보 설치로 하천 생태계 구간이 단절되고, 수생태의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공 구조물로 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습지·자연형 어도 설치 등 생태계 파괴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강 개발 사업의 전례를 들어 한강살리기 사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에 비해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에선 샛강과 자연형 어도 설치, 생태습지 조성, 희귀 생물종 이식 및 증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대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실제 정부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으로 상당수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며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경제적 타당성 효과의 근거로 내세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경제성 분석은 그 방법이나 전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17개 세부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전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정당하고 필요하다”

부산지법,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기각판결

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반대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완공을 향해 달리게 됐으며,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가장 진도가 느린 낙동강살리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두 판결은 앞으로 남은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4대강반대소송단’ 1천8백19명이 지난해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의 한강살리기 사업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 데 이어 부산지법에서도 이날 기각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강, 영산강의 가처분신청과 한강, 낙동강 본안소송 모두 사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운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따라 정부가 승소판결을 받은 한강, 낙동강의 본안소송이 앞으로 있을 금강, 영산강의 본안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금강·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가장 진도가 늦었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이번 법원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상주보 건설 현장.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비닐하우스와 농약, 비료, 쓰레기로 신음하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주민 쉼터로 거듭난 부산 북구 낙동강 화명지구의
과거(작은 사진)와 현재 모습.





국토해양부

취소소송은 12월 중 변론 종결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어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12월 3일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이번 낙동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근거 없는 의혹 중심의 '정치쟁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정부와 기각판결을 받은 4대강반대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수질 문제

4대강반대소송단은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 측은 수질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재판 과정을 통해 증명했다. 특히 오염원을 차단하면서 가동보를 통해 저·갈수기에도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경우 4대강반대소송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침수 문제

4대강반대소송단은 일부 지역의 침수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보(洑)가 설치되더라도 침수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배수시설 보강 등 대책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홍수 위험

4대강반대소송단은 보 설치로 발생할 홍수 위험을 지적하고, 본류보다는 지류 중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류 정비와 함께 지류하천 정비에도 매년 투자하고 있는 점, 가동보를 통한 수위 조절로 충분히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점, 수리모형실험 결과 4대강살리기 사업 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토대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법매립 폐기물

4대강반대소송단은 폐기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정부 측은 전문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취수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완료 후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참여하여 엄격히 검증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해왔다.

생태계 피해

4대강반대소송단은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가 보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가동보와 자연형 어도를 통해 보 사이의 생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수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점,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 정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임을 주장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률(2010년 12월 9일 기준)

전체 및 수계별 공정률

구분	계획	실적	달성률
전체	40.6%	41.5%	102%
한강	45.4%	44.9%	99%
낙동강	38.0%	38.7%	102%
금강	48.0%	50.4%	105%
영산강	40.6%	42.4%	104%

보 건설 공정률

구분	계획	실적	달성률
보 공정률	63.7%	67.0%	105%
콘크리트 타설 물량	876,960㎥ (61.8%)	989,122㎥ (69.7%)	113%

수계별 준설 실적

구분	전체 물량	준설 실적
한강	48,934,000㎥	35,746,000㎥(74%)
낙동강	398,145,000㎥	182,507,000㎥(46%)
금강	46,727,000㎥	26,929,000㎥(58%)
영산강	27,842,000㎥	16,601,000㎥(60%)

낙동강 취소소송 일지

2009.11.26
국민소송단,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 제기
원고 : 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
피고 : 국토해양부 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요 쟁점 :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위반 여부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여부 등

2010.1.15
집행정지 결정신청 심문 종결

2010.11.12
변론 종결. 8회의 변론기일, 1회의 현장검증(함안보와 달성보), 10명의 증인신문 마침

2010.12.10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신청'에 대해 기각판결 선고

디자인과 창의력의 만남

디자인 코리아 2010… ‘디자인을 통한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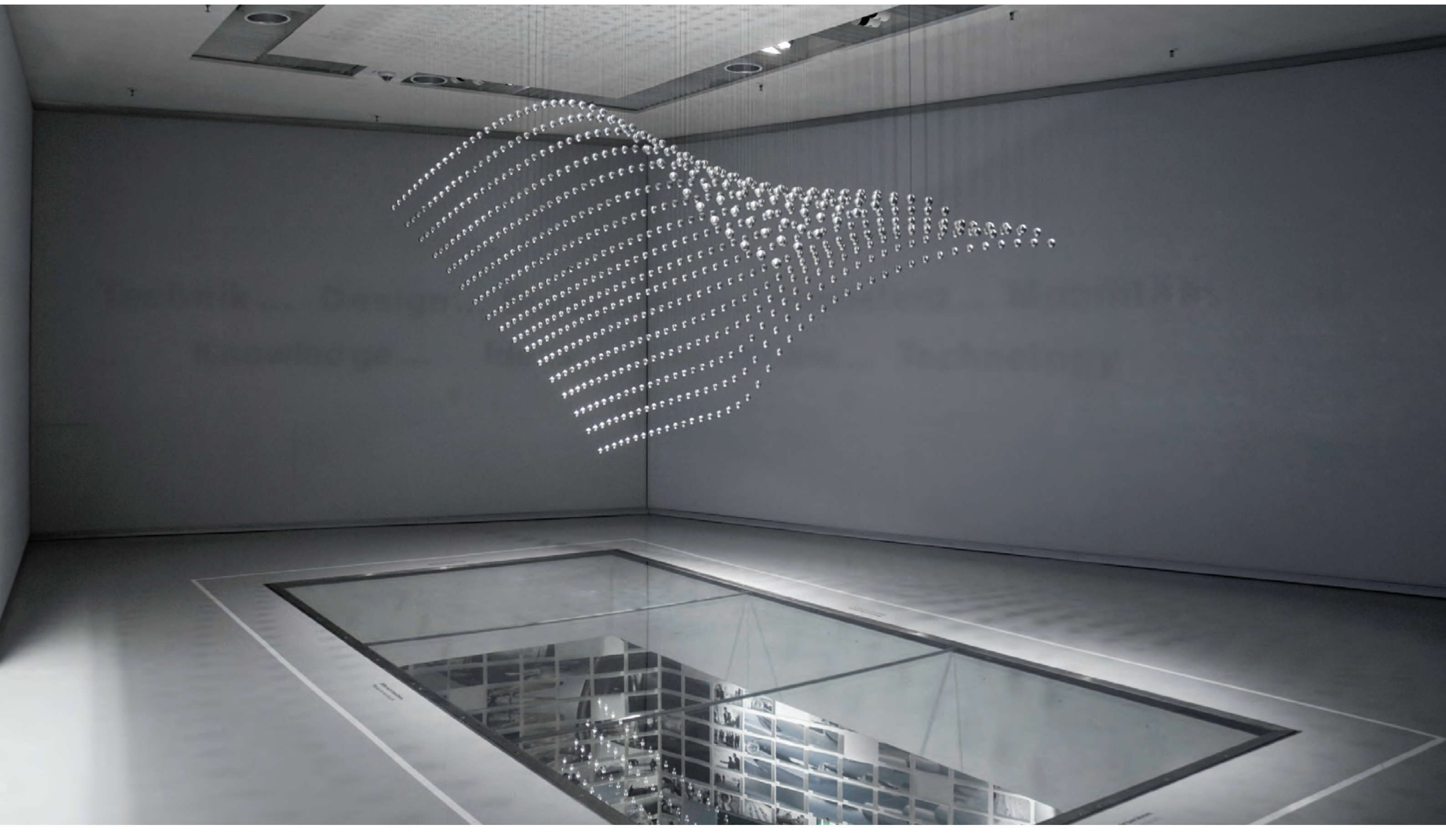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코리아 2010’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디자인을 통한 공존’이라는 콘셉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작품 전시와 B2B 프로그램 및 디자인 트레이드쇼, 브랜딩스쿨 워크숍 등 디자인 전문회사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부대 행사들이 펼쳐졌다.

특히 ‘디자인과 브랜드 파워’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2012 런던올림픽 디자인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칼 하이젤먼과 아이팟, 나이키, 모토롤라, Xbox 등의 디자인을 담당한 산업디자이너 스캇 윌슨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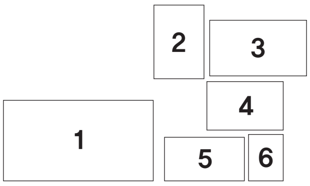
한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한 ‘차세대 디자인 리더’관에서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계, 컵을 올리면 조명이 켜지는 테이블, 볏짚으로 만든 의자 등 디자인과 창의력을 골고루 갖춘 아이디어 상품들이 등장해 차세대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 기계와 전자부품의 상호작용으로 역동적 예술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표현한 〈Kinetic Sculpture〉.
2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한 '영디자인 스튜디오'는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3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봄'을 그렸다.
4 포스트잇을 이용해 종이의 질감을 살렸다.
5 브라질 바우하우스에서 출품한 스탠드는 사용자의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프랑스의 사강 와이어리스가 출품한 이북(eBook) 리더기. 'G20 베스트 디자인' 섹션에서 관람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 참게탕
강원도 정선 올챙이 국수
재미있는 올챙이 국수를 찾아서!
참게가 장원급제를 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경북 안동 헛제삿밥
부부금슬의 상징, 백합을 맛보며~
제사는 안 지내고 헛제삿밥만 먹은 사연은??
고소한 전어 냄새가 솔솔~, 충남 서천 전어구이
지호도 죽순처럼 쑥쑥 자라길~
백합처럼 딱딱! 맞는 우리금슬~, 전북 부안 백합탕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바로 그 전어!
다시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세요! 숨겨진 맛과 이야기를 찾아!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기 획 특 집

대한민국, 세계 최대 경제영토 확보했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으로, 그리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나라가 부강해지니 국제적 위상도 올랐다. 지난 11월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흥국 최초로 의장국이 됐다. 신흥국 리더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더 넓은 경제영토, 더욱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이우정



경제영토 '넘버원' 코리아

무역흑자·수출 사상 최고… 내년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밝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으며,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무역흑자와 수출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발판으로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옛날이야기 같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 산업계의 목표는 '일본 따라잡기'였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에서 일본을 제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개최한 서울 G20 정상회의,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까지, 일본의 '한국 따라잡기'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긴장한 곳이 일본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에 이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과 FT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전자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이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TPP)' 체결을 '제2의 개국'으로 부를 정도로 중시하며 추진 중이다.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그리고 주요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며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협상 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의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80퍼센트 이상 증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수출에 달려 있다. 개항 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출 화물들이 비행기에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미국, 유럽,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주요국을 포함해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퍼센트"라며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FTA는 '경제' 이상의 가치도 지닌다. 이 대통령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국가로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EU는 북한 도발 시 가장 강경한 비난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중립 입장)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FTA도 안보라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출만이 살 길'이란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듯 우리나라는 올 들어 11월까지 총수출액이 4천2백34억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1940년대 후반 교역 규모가 세계 1백위권 밖에 머물렀던 '무역 변방국' 대한민국으로서 올 상반기 '세계 10대 무역대국' 진입 소식 이후 또다시 반가운 뉴스다.

12월 1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올 1~11월의 누적 무역흑자는 3백91억8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연간 무역흑자가 4백10억 달러, 수출은 4천6백50억 달러를 넘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내년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인 'A'와 향후 전망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뉴스도 '무역 강국' 한국의 미래에 힘을 실어준다.

기획재정부는 12월 9일 이에 대해 "다이나믹한 경제, 건전한 재정, 순대외채권국으로서의 지위가 S&P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는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피치는 'A+'로 유지하고 있다.

'FTA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위권 내외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가 12월 8일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 2백45개에 근거해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을 탈피해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아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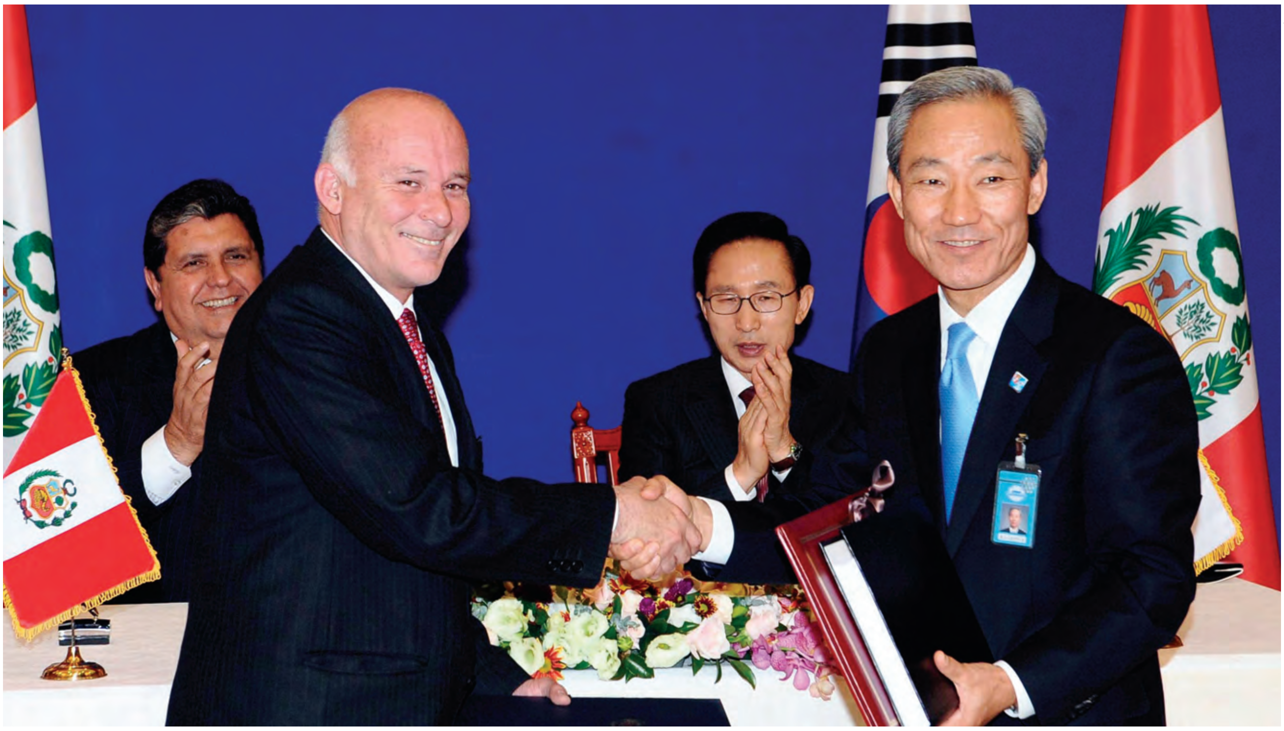
우리나라 신용등급 무디스 'A1', 피치 'A+' 유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9위,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 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였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하위 2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1위, 정보통신 수출 비중 1위, 특허 출원 1위 등 혁신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위상은 1인당 GDP 10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9위, GDP 성장률 7위, 세계시장 상품 점유율 7위, 무역 규모 8위, 명목 GDP 14위, 총인구 15위라고 집계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다급한 불은 껐지만 회복세는 더디고,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교역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스스로 만들어낸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지양하고 한미 FTA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라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FTA 가서명식을 가졌다.

한국, 세계 자유무역 허브 국가로 도약

FTA 통해 경제영토 가장 활발히 넓히는 국가로 자리매김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혀라!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5개의 FTA 협정이 발효됐으며 서명 혹은 타결된 FTA가 3개, 협상 중인 FTA가 7개에 이르는 'FTA 허브' 국가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눈을 떴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FTA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에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시장을 품에 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가장 활발히 넓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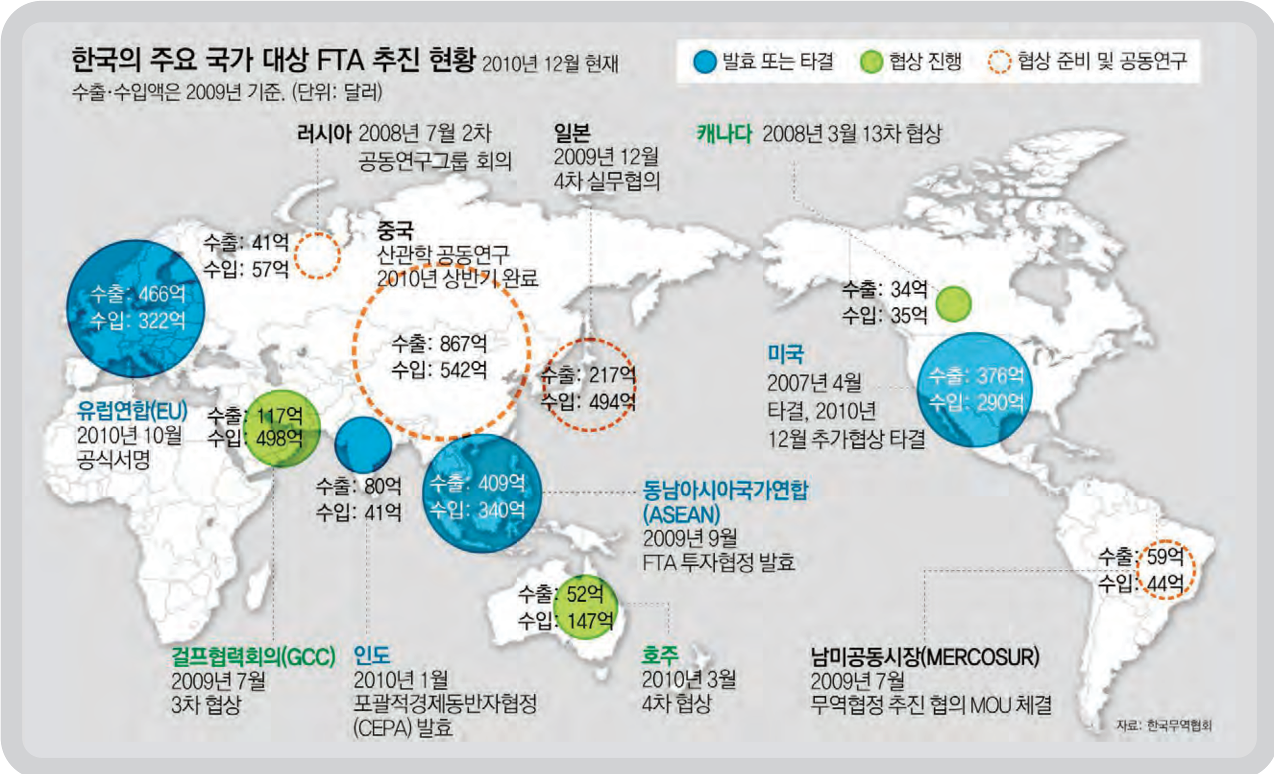
첫 번째 대상 국가였던 칠레와는 2002년 10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년 4개월 뒤에야 이뤄졌다. 당시 협정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과 농촌 출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본회의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렇게 어렵게 발효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는 자동차와 컬러TV 수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다음 FTA 협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200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는 1년 1개월 만인 2005년 12월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5년 7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2006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준안 처리에 11개월이 걸렸다.

한·칠레 FTA, 자동차 수출 확대 등 긍정적 효과 가져와

최근 들어서는 올해 9월 페루와 FTA 협상을 타결했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두 달 후인 11월 방한해 이명박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 FTA에 가서명하기도 했다.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 및 자동차 관세가 10년 이내에 폐지된다.

FTA 비준안은 대체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 협정 대상이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넓은 분야에 걸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관련 의원들의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FTA 발효도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은 올해 10월 EU와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천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GDP의 30퍼센트 수준으로 미국(14조3천억 달러)보다 2조 1천억 달러가 많다.

하지만 한미 FTA 추가협상이 EU와의 FT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 역시 자동차 부문에 불만을 가진 국가가 많아 한미 FTA를 본보기 삼아 추가협상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한홍열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애초에 맺은 협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보였다"며 "특히 EU는 한국과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많다. 호주와는 지난해 3월 양국 정상이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후 4차례 협상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2003년에 시작됐지만 제조업과 농업개방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사실상 중단됐다.

걸프협력회의·뉴질랜드·터키·캐나다 등과 협상 진행 중

한중 FTA는 올해 양국 정상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최근 3년 반 동안 끌어온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이 밖에도 걸프협력회의(GCC),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FTA 등으로 한국의 경제시장을 세계로 넓혀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국가 면적은 좁지만 금융 허브와 적극적인 무역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넓히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넓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돼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G

글 · 박형준(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20여 년 숙원 이제 비준만 남았다

1989년 첫 언급… 협상은 3년 6개월 만에 종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약 3년 반 만의 일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수출국이며, 우리 총수출의 19.9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 데다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인 나라다. 그만큼 한미 FTA 협상은 오랫동안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뜨거운 이슈가 돼왔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타결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07년 4월 한미 FTA가 정식으로 체결된 뒤 약 3년 반이 지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금부터 21년 전인 1989년이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좋은 나라들'에서 한국을 꼽았던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FTA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3년 9월이다. 당시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면서 2006년까지 약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한미 FTA 협상은 논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8년간, 처음 언급 시점부터는 무려 20년 넘게 지속돼온 한미 간의 오랜 숙제였다.



연합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현대자동차 판매점.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수출, 장기적으로는 완성차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면에서 중요한 FTA 협상 상대였다.

무역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배타적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FTA는 관세나 쿼터 같은 무역장벽을 완화해 자유무역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다. 따라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 확대가 기대돼왔다. 하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가격이 싼 제품만이 살아남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대책을 마련하고, 미국은 자국 내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는 자동차업계를 달래가며 수년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가 계속 미뤄져왔다.

무역장벽 완화로 자유무역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 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 미국 정부가 한미 FTA와 별개로 쇠고기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부닥쳤다.

촛불시위가 진정된 이후인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으며, 외교통상통일위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둔 상태였다.

미국의 의회 비준은 더욱 요원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세계

적인 경기한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선도 깐깐해졌다.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자동차와 같은 미국의 사양산업을 살리고 한국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도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하지 않자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2배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협상을 들고 나왔다.

이후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양국은 제1차 추가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 11월 30일 시작된 제2차 추가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른 것이다.

추가협상 타결로 FTA 발효 위한 국내 비준 절차 돌입

이번 FTA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은 다시 한 번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비준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비준 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시작해 이번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계획이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하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FTA 비준 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진행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 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 동의를 하게 된다. 또 한국은 통상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행법률안 제출 뒤 90일 이내에 심의 표결해야 한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과 이행법안이 각각 의결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즉각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과 비준을 하게 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상대국에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면 한미 FTA는 정식 발효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미국 의회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 FTA 비준을 거부, 결국 추가협상에 이르게 했다. 사진은 미국 내 한국자동차 회사에서 작업 중인 현지 근로자들.

한미 FTA 비준 절차

	한국		미국
	비준 동의안	이행법안	이행법안
정부안 제출	외교통상부, 국회 제출	각 부처별로 국회 제출	미국무역대표부(USTR), 이행법안 상·하원에 동시 제출
의회 처리	외교통상위 심의·의결, 법사위 심의 불필요	이행법률안별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 후 법사위 심의	**하원** ▷ 세입위 심의(45일 이내) ▷ 본회의 표결(15일 이내) **상원** ▷ 재무위 심의(45일 이내 혹은 하원 표결 후 15일 이내) ▷ 본회의 표결(15일 이내)
	본회의 심의·의결(처리시한 없음)		
정부 처리	의결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 대통령은 15일 이내 서명·비준		표결 후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 대통령이 서명·비준하면 법률로 입법 처리
발효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 다음 60일 경과 후 발효.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 발효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산 승용차 관세(2.5퍼센트) 폐지 시기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줬다.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전용 차량야적장에 늘어선 자동차들.

車 양보하고 양돈·제약·비자 얻었다

자동차·보건의료상품 관세 철폐 및 파견 근로자 비자 연장 등 이득 얻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미 FTA 추가협상은 서로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그리고 비자까지 추가협상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한미 FTA가 드디어 타결됐다.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내용은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에 상당 부분 양보했고, 대신 돼지고기와 복제의약품 규정에서 우리 쪽에 유리한 결론을 얻어냈다.

덤으로 미국 파견근로자의 비자도 연장하는 이득을 얻었다. 이익의 균형 여부는 숫자상으로 계량해 측정하기 어렵지만 서로 이익 균형을 모색한 결과였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4년 뒤 상호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행 관세 2.5퍼센트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고, 한국도 발효일에 현행 관세 8퍼센트를 일단 4퍼센트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5년째에 없앤다. 현재 양국이 2012년 1월 1일 발효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비준 절차가 진행되면 2016년 1월 1일에 모든 승용차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차세대 승용차인 전기차(EV)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우선 관세 8퍼센트를 4퍼센트로 인하한 뒤 한국과 미국(현행 관세율 2.5퍼센트)이 4년간 균등 철폐에 나서게 된다. 애초 규정은 9년간 균등 철폐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승용차 관세 사라진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에서 우리 업체보다 앞섰다는 평가가 많아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화물 자동차는

발효 후 7년간 유예한 뒤 2019년부터 2년간 균등 철폐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문제에 한해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되 우리 쪽도 관세를 즉시 없애지 않아 미국과 동일하게 4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또 2007년 협정문에는 없었던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이후 10년간 발동 가능하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최대 4년간 유지할 수 있고 횟수 제한도 없다. 다만 미국측이 애초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생 시 발동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삽입되지 않았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차별 발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 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12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이는 통상 6개월의 유예기간보다 긴 것이다. 다만 이산화탄소 연비 기준은 사후 검토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의료상품 최장 10년 안에 관세 철폐

완성차 쪽에서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지만 자동차 부품은 우리 쪽의 실질적 이득을 지켜냈다. 부품에 대해선 현행 합의대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 또한 세이프가드는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피해도 덜었다.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의료상품은 최장 10년 안에 관세(약 8퍼센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싼 가격에 미국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가협상에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미국 유럽 등 다국적 제약사가 주로 갖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 제조를 허가해달라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사실을 특허권을 가진 미국 기업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허권자가 순순히 승낙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을 강행하면 소송으로 가고 그 경우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국내 업체에 복제약 제조 허가를 금지하게 된다. 당초 협정에서는 18개월 유예토록 했으나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외교통상부 홍정기 통상협력과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냉동육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된 데 대해 관련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돈농가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2년 동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데 대해 안도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입개방의 고통을 고려하여 한미 통상장관 협의 과정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축협조합도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G

글 · 신헌철 박기효 김병호(매일경제 기자)

한미 FTA 타결 합의 내용

	추가협상 결과	기존 합의 내용
승용차	모든 승용차 관세 양국 4년 후 철폐 ▷ 한국 : 발효일 관세 8%에서 4%로 인하, 4년간 유지 후 철폐 ▷ 미국 : 관세 2.5% 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 한국 : 모든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미국 : 3천cc 이하 즉시, 3천cc 초과 2년 후 철폐
전기자동차	한국(4%)과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 한국 : 발효 즉시 관세 8%에서 4%로 인하	한국과 미국 모두 9년간 균등 철폐
화물자동차	미국 9년간 관세(25%)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세이프가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 도입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발동 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무제한	신규 도입
안전기준	연간 판매대수 2만5천 대 이하 제작사, 미국 안전기준 준수 시 한국 안전기준 준수로 인정	연간 판매대수 6천5백 대 이하
연비·CO_2 기준	4천5백 대 이하 판매 제작사(2009년 기준)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	2012년부터 연비·CO_2기준 도입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빗살 등) 관세 철폐 시기 2016년 1월 1일로 연장	2014년 1월 1일 관세 철폐
의약품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3년 유예	기존 18개월 유예
기업 내 전근자(L-1) 비자	대미 현지투자기업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신설 사업체 1년, 기존 사업체 3년

"한국은 실리, 미국은 명분, 모두 윈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공식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우리 측 선봉장으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후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도 "잘못됐다고 물러나라면 해병대에서 밥이라도 짓겠다"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 5일 오전 외교통상부 브리핑룸.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추가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건진 것이 많기 때문인 듯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양보했지만 축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압력을 버텨낸 것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잘못됐다고 물러나라면 해병대에서 밥이라도 짓겠다"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도 이번 추가협상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뤄진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이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라도 지원하려고 한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총칼은 못 지더라도 밥이라도 짓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월 3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로 FTA와 인연을 맺은 김 본부장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페루 등 우리가 맺은 핵심 FTA 협상을 이끌며 우리나라가 'FTA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과의 지루한 FTA 협상에서는 불굴의 투지와 뚝심을 발휘했다. 그 덕분에 9차례에 걸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와의 마라톤 논의 끝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미 FTA는 2007년 6월 서명된 이후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발효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 간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내에 정치, 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왔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정치권과 업계, 미국 노조 등에 확산돼왔다"고 그간의 분위기를 밝혔다.

"해외시장 안정적 확보, 우리 경제성장 위해 긴요하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진행된 이번 추가협상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며 그간의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11월 8~10일 서울에서 한미 간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된 바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 차이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화요일(11월 30일)부터 금요일(12월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저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협상 일정을 이틀로 예정했지만 4일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상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참여해 김 본부장을 도왔다. 김 본부장은 협상 기간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타결이 되느냐,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문턱을 수차례 넘어야 했다는 것.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동아DB

손학규 민주당 대표(왼쪽)가 12월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러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 도출로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한미 FTA 비준과 발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에서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과 함께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연장 유예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FTA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돼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돼 있는 한·EU FTA, 또 한미 FTA를 통해 세계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기존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회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해운업계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에겐 미주항로의 물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DB

車 부품·섬유·항공·해운업체 '함박웃음'

전자·철강 등 국내 기업 "FTA 타결, 실보다 득 많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업계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각양각색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업계에서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후 일부에서 '자동차 대신 농산물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 부품은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을 수 있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각된 자동차 부품업계는 추가협상 타결로 미국 수출이 늘고, 한국 부품을 쓰는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러브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이번 4퍼센트 관세 인하 효과로 대미 수출 물량이 약 20퍼센트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 역시 3년 후 폐지하기로 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퍼센트 관세 철폐 시기가 4년 후로 연장된 것은 아쉽지만, 낙담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섬유 수출, 관세 철폐로 연간 1억8천만 달러 증가 기대"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FTA 체결로 3년 후 미국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일본차보다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미뤄져 아쉽지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폐기됐던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지만, 현대·기아차 등이 이미 미국 현지에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현지 생산분도 제외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동부증권 임은영 연구원은 "미국산 차량에 대한 안전·환경기준 완화, 관세 제한 등은 모두 미국 측 요구가 수용되긴 했으나 국내 완성차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섬유 및 항공·해운업체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억8천3백만 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2천5백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최고 32퍼센트의 관세 철폐로 대미 섬유 수출은 연간 1억8천만 달러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도 한미 FTA 타결로 미주항로의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주항로의 물량은 전체 해상 물동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화물은 물론 여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대미 수출 비중이 적은 업종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전자업계는 이미 상당수의 물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NAFTA) 협정에 의해 무관세 종목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관세 철폐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IT·전자 "FTA 영향 미미하나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

반도체와 휴대전화의 경우도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전제품은 1~5퍼센트 안팎의 낮은 관세가 붙어서 FTA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도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TV 제품들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휴대전화, LCD TV, PDP TV, 모니터, 냉장고 등 대부분의 제품들을 멕시코에 있는 2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전반적인 교역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 철강·석유화학 업체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4년부터 이미 양국 간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고, 수출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수출 품목인 항공유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

글 · 김병용(아주경제 산업부 기자)

국내 5개 경제단체 반응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높여 대미 수출 기여할 것"

국내 5개 경제단체 역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월 5일 논평에서 "이번 추가협상 타결로 그동안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미칠 효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협상 타결은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과 한국산 부품 조달 비중이 높은 미국 현지공장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상 지연에 따른 한국 차에 대한 여론 악화 등 미국시장에서의 커다란 불확실성이 제거돼 명확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가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정치외교·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숱한 난관에도 양국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상호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익 균형을 위해 끝까지 정부가 노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12월 5일 낸 성명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비준이 지연돼온 한미 FTA가 쟁점 현안들을 모두 해소하고 돌파구를 마련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쇠고기 등 우리나라에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며 협상을 마무리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무엇보다 세계 3대 시장인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협상 타결이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돼 미국 수출도 늘고 한국 부품을 쓰는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車 부품 관세 철폐로 中企 수출 확대"

100년 내다보고 선점할 시장·산업에 초점 맞춰 전략적 선택·집중 강화해야

자동차 관세 철폐를 5년 유예함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관세비용과 돼지고기, 의약품 특허 연계 분야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수익을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단기적인 경제효과만이 아니라 1백 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선점해야 할 시장과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불룸버그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승용차 관세를 4년 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조영철 기자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미 FTA가 논의되기 시작한 게 1989년이다. 햇수로 치면 21년이 넘은 이슈다. 2007년 4월 2일 타결되고, 6월 30일 양국 정상이 서명했으니, 지난번 타결 이후 꼬박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지난번 2007년 협상문안의 수정과 새로운 조항의 삽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벌인 협상은 아니다. 공식적인 표현이 없으니 일단 영어로 번역된 '추가협상(Supplemental Agreement)'으로 부르기로 한다.

사실 한미 FTA는 출범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한미 FTA 비준 가능성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설마 될까 또는 할까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러기에 지난 3년 5개월은 이들의 예상이 맞았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추가협상에서 '주고받기'를 한 결과, 한미 양국 정부는 길고 긴 협상의 터널을 지났다. 이번 추가협상 끝의 타결은 한미 양국 대표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관심 사안은 얼마나 주고받기가 공정하게, 즉 이익 균형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美, 정치·외교적 수단으로서 한국과의 FTA는 불가피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서도 한국과의 FTA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한국이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미국은 일관되게 민주당 정부와 샌더스 래빈과 같은 민주당 의원, 자동차 노조가 주장하는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승용차, 화물차, 전기차 부문에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다. 타결 직후 나온 자동차 노조의 지지 발언이나, 민주당 의원들과 미국 정부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만큼 이번 추가협상에 만족한다는 의미다.

파트너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평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을 뺏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추가협상 결과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자동차협회의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과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상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95만 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로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 우리 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협상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자동차협회의 반응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 가능성 높아진 것은 긍정적

한국이 요구해서 관철시킨 조항도 있다. 돼지고기 수입관세 철폐 시기가 2년 연장됐고, 의약품 특허 연장 역시 3년간 유예됨에 따라(2007년 1년 6개월 유예에서 1년 6개월 추가 유예)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약품들로 인한 매출 성장이 보장됐다. 경제적 효과로는 보기 어렵지만, 주재원 비자도 3년마다 연장신청을 했는데 2년 더 연장됐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5년 유예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비용과 돼지고기와 특허품 연계 분야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수익을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 물론 수출 탄력도나 수요 탄력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관세효과는 엇비슷하게 보인다.

문제는 경제적 효과도 정치적 효과도 아닐 수 있다. 세계경제가 위기 후 새로운 판짜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경제 블록화, FTA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간 체제 대체화 등 미세 및 거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단기적인


동아DB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는 당초 2014년 1월 1일에서 2년 더 연장됐다.

경제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가정도 가능하다.

향후 몇 개월간 양국 정부, 국회와 의회는 비준동의 절차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판도와 글로벌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10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FTA의 가속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속 가능성, 거리가 먼 시장을 심리적으로 당기는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선진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비준 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둘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동북아 경제는 한국뿐이다. 다투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앞서 우리가 선점해야 할 시장과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해지는 건 우리다. 2007년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우리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부, 기업, 가계의 경제주체들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전략,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는 전략적 강소국으로 하루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장 앞서나가야 한다.

한미 FTA가 실패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돌아간다.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상 선진국과 신흥국 리더로서 한미 양국의 위상에 상당한 흠이 생길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더 얻어내면 좋다. 앞으로 남은 중국과 일본과의 FTA는 동북아시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G

수입품 가격 인하… 소비자 부담 줄어

미국산 돼지목살 1킬로그램 3810→3115원, 오렌지 1개 800→530원

최고의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 소식은 국내 경제에 큰 지각변동을 몰고 올 만한 사안이다. 당장 소비자들의 구매,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분명한 건 양보할 사안도 있었지만 미국 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업계도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이 유예돼 3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 예정대로 2012년 1월 1일(이르면 내년) FTA가 발효된다면 전체 상품의 90퍼센트 이상이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일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한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제품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는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2년 늦춰졌다. 2016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 돼지보다 60퍼센트가량 저렴한 미국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냉동목살 도매가격은 수입 단가(2천7백81원)에 이윤과 제비용을 더해 1킬로그램에 3천8백1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이것이 2016년부터 25퍼센트 관세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대략 킬로그램당 3천1백15원에 먹을 수 있게 된다.

과일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롯데마트 김석원 과일담당 MD는 "현재 전체 과일 매출 중 미국산 비중이 15~20퍼센트 정도 된다"며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브랜드 위주에서 중저가 브랜드까지 수입품목 다양화"

12월 6일 기준으로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1개(2백 그램 내외)의 가격은 8백원. 오렌지는 관세율이 50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5백30원으로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해 상추 등 채소와 체리, 복숭아 등은 FTA로 가격 변동이 되지 않는다.

골프 마니아들도 한미 FTA 타결 소식이 반갑다. 캘러웨이

FTA 이후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가격 (단위 : 원)










제품	현재	관세 철폐 시
캘리포니아 오렌지 1개 (200g 내외)	800(현재)	530 (관세 철폐 시)
미국산 청포도 (750g)	5980	4120
캘리포니아 아몬드 (500g)	8980	8310
캘리포니아 호두 (500g)	1만800	7450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50ml)	3만8000	3만5180
테일러메이드 R9 슈퍼맥스드라이버 1개	58만	53만7000
로버트 몬다비 카베르네 소비뇽 1병	7만8000	6만6300
미국산 돼지고기 냉동목살(1kg)	3810	3115

12월 6일 현재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 정상 판매가 기준. 관세 철폐 시 예상 가격은 현행 관세율에 따라 일괄 계산한 것으로 유통마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동아DB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앞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FTA 추가타결로 가격은 현 시중가의 60~70퍼센트 선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나 타이틀리스트 등 고가의 미국산 골프 클럽에 부과되는 관세 8퍼센트가 FTA 발효와 함께 철폐되면 가격에 따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정품 기준으로 58만원에 팔리는 테일러메이드 R9슈퍼맥스드라이버는 관세 철폐 시 53만 7천원까지 떨어진다. 수백만원대인 아이언 세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이 싸진다. 다만 미국 브랜드라고 해도 중국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제품은 한미 FTA와 상관없다.

의류 등 공산품 소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코치 센존, 마이클코어스, 캘빈클라인컬렉션 등 미국산 명품 브랜드들의 값이 싸지고 일반 백화점 가격도 면세점 가격과 차이가 좁혀질 전망이다.

제약사들, 제도 이행 유예기간 동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또한 국내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미국 브랜드의 수입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인수 롯데유통전략연구소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의 고가 브랜드 수입 위주에서 벗어나 중저가 브랜드까지 수입품목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복제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 이행이 당초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된 제약 분야는 업계 차원에서 '잠정적 손실 만회'라는 이익을 얻었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 제도는 국내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 제조를 허가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식약청이 이를 특허권을 가진 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동적으로 국내 기업의 복제약 제조를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이행되면 소비자들도 복제약 대신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이행 유예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장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제약사들도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예기간 3년 동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제약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한편 미국에 지사를 둔 국내 기업 직원의 비자 유효기간도 신규 지사 창설의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돼 해당 지사 직원과 가족은 비자 갱신을 위한 입출국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G

글 · 주성원(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임시세이프가드… 스냅백… 비위반 제소…

용어를 알면 FTA가 보여요

FTA는 국가경제뿐 아니라 일반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어렵고 낯선 용어 탓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FTA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일러스트 · 이우정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에 관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관세 폐지 및 양국 간 특혜 무역협정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공동체 Economic Union

회원국 간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를 이른다.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이고 공동 조세정책과 단일 화폐의 단계로 발전해 경제정책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C/O · Certificate of Origin

수출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다. 증명 방식에 따라 기관증명방식(세관, 상공회의소)과 자율증명방식으로 나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 Harmonized System

국제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되며, 그 이상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HSK(HS of Korea)는 10자리 수를 사용한다.
예 : 0201.20.1000(1부 02류 식용설육 쇠고기 중 갈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제한 품목표 Negative List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항목을 열거한 품목표.

제네릭 의약품 Generic Drug, Copy Drug

신약과 동일한 주 성분을 포함시켜 복제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주로 합성의약품에 대해 사용하는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규격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평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SG · 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라고도 하는데,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이다. 1975년 미국이 도입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발동시킨 '슈퍼 301조'가 대표적인 조항이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이라도 수입 증가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기간 보호정책을 펼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현행동결 Ratchet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치'로,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스냅백 Snapback · 관세철폐 환원조치
상대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이익을 무효화 혹은 침해하고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6개월 안에 합의된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다.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 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 등 금융상의 위기나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거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SSG · Special Safeguards
미리 정해진 품목일지라도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투자자 · 국가제소권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를 받은 나라 정부의 조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투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양허관세 Tariff Concession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국제적인 협정이다. 불가피하게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 정부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를 얻어야만 하며, 상향 조정된 관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품목허가와 특허 간 연계 Patent Linkage
의약품 특허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 내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후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으로, 만약 특허기간 도중에 복제약품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 개인 혹은 기업은 그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후이행 검토 Post Implementation Review
FTA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기술 또는 적합성 평가가 이행된 직후에 그 효과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내 전근자 비자 L-1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했을 때 발급받는 비자로, 기존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신규 지사 1년, 기존 지사 근무 시 3년이었지만, 이번 FTA 추가협상을 통해 신규와 기존 모두 5년으로 늘어났다. G

정리 · 이윤진 기자

FTA 포털 fta.customs.go.kr

빗장 열어 피해 볼 국내 산업 대폭 지원

한·EU FTA 피해 축산·화장품·의료기기에 집중 지원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발효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도 있다. 이를 보완하는 정부 대책들을 살펴봤다.

한미 FTA 최종 타결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다. 양국의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늦어도 2012년쯤 발효되면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실질 GDP)은 6퍼센트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10년간 제조업 대미 수출액과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각각 연간 13억3천만 달러와 7억5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정부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쌀 가공공장 모습.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그해 6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피해보전 대책으로, 경쟁력을 길러 활용해야 할 부문은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한미 FTA뿐 아니라 향후 체결될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2008년부터 10년간 21조1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는 제약산업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2008년부터 10년간 1조3백6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주로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진행되고 있다. 현재 총 2백24개 추진과제 중 1백99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다.

축산업 10년간 2조원 지원 · 축산농가 세제 지원 강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FTA로 인해 우려되는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한·EU FTA 정식 서명을 마치고 난 한 달 뒤인 11월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을 내놓았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골자로 하여 한·EU FTA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한·EU FTA를 계기로 기존의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이 추가 보완된 것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보완대책으로도 활용된다.



연합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뿐 아니라 제약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제조서비스업에 포함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

농수산업 분야에 포함되는 축산 분야는 한·EU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미 FTA 보완대책에서 지원하기로 한 4조7천억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2008년 수립된 축산업 발전대책의 2조1천억원 등 지원금을 증액한 것이다.

축산 분야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유통·가공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특히 시설 현대화 추진, 방역 관리를 통한 질병 근절사업,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은 총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화장품 분야는 7백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1천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을 통해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 인종별 피부 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부문은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와 정보기술(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5년간 화장품 7백억원 · 의료기기 1천억원 지원

정부는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는 기존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의 피해보전 대책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 기간을 7년 연장하고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는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될 수 있도록 재도입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기존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마련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원래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이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공공 서비스나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경제구조 선진화 위해 FTA 체결은 필수

한·EU FTA 발효 시 수출 증가·일자리 창출 기대

지난 11월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보호주의 저지와 자유무역의 목소리를 주도하는 세계 통상 중심축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환율 등 어려운 문제를 중재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제기하는 등 리더십을 적극 발휘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고 있다.


조영철 기자

김화동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우리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Global FTA Network)' 구축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호주의가 우려되는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해나가기 위해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경제적 이득 ·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한미 FTA가 타결되어 내년 중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대외교역의 틀을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올해 10월 정식 서명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경제 규모가 16조4천억 달러(2009년 기준)인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EU와의 FTA는 수출 증대는 물론 우리의 '경제구조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 문화, 인적 교류, 관광, 인권,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교역 증대,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5.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연평균 25억3천만 달러가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도 최대 25만3천 개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EU시장 규모와 관련 산업 간 연계를 감안할 때 10퍼센트의 높은 수출관세 폐지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의 경우도 중국과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섬유산업 또한 주력 품목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가격 하락과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면 EU산 와인에 대한 15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되어 와인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와인 품목이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낙농품, 과일 등 유럽산 먹을거리에 대한 가격도 내릴 전망이다.

이러한 소비자 이익효과는 한·EU FTA를 통해서만 3백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또한 내년 7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EU와의 FTA는 수출 증대는 물론 우리의 '경제구조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기회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FTA를 제대로 활용할 때만 가격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관세 인하와 철폐에 따른 수출입 품목의 가격경쟁력 개선효과를 파악해 수출(입)처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간 여러 FTA를 체결했음에도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FTA 관련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사 생산 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등 FTA 활용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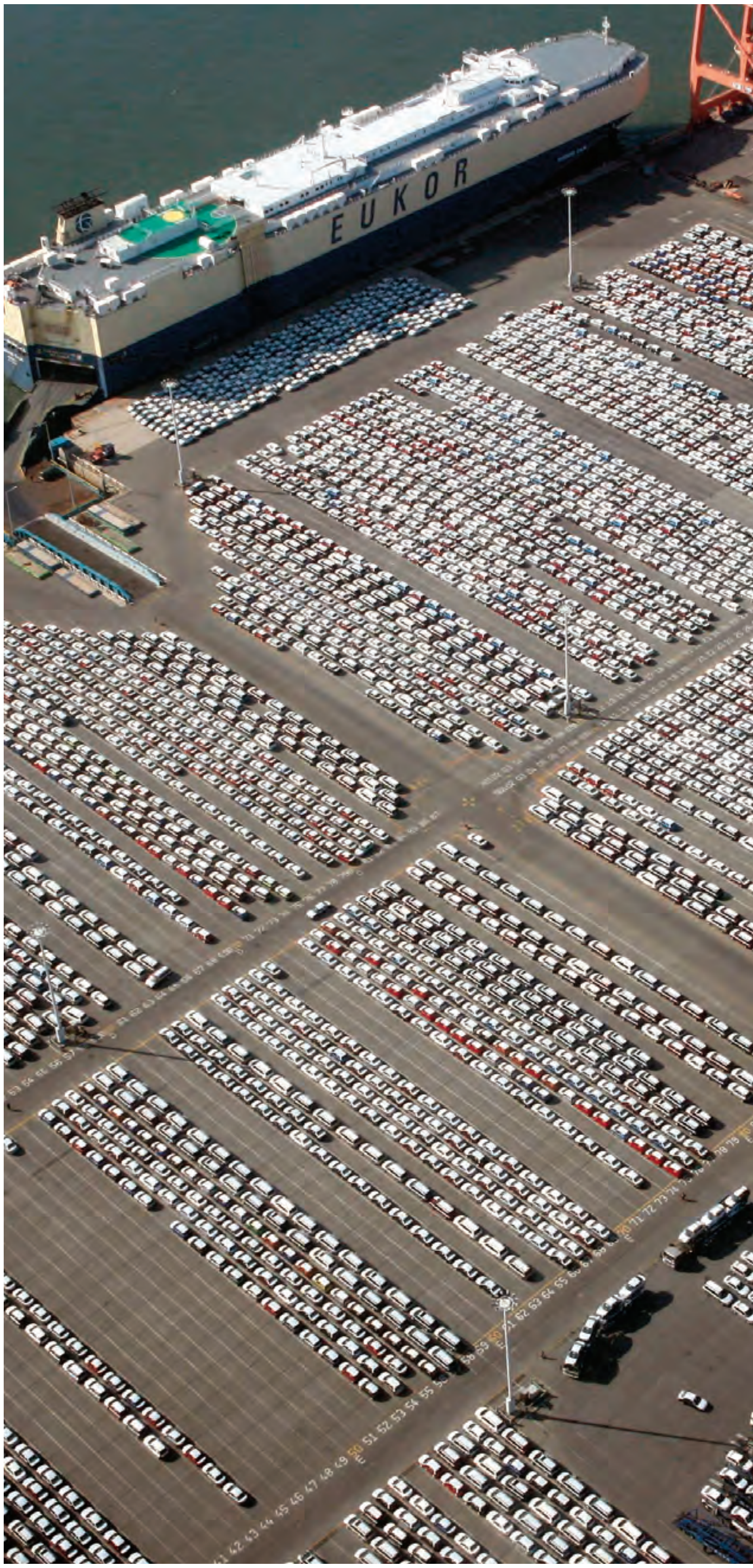
아울러 투자와 산업협력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제도와 관행을 FTA나 개방화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 전략적·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에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 활용 설명회,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30퍼센트에 달하는 6천 개 업체에 대해 무상으로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박람회, FTA 상대국 현지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이 FTA를 거대 성장축으로 하여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의 통상주권이 박탈됐던 아픈 역사가 있었으나, 1백여 년이 지난 이제는 'FTA 허브 국가'이자 통상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이다. G



경기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용 자동차들.

"서민의 금융친구…대출보증 10조원 돌파"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를 모토로 내걸고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연간 주택보증 공급액 10조원을 돌파했다.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만나 그 비결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살폈다.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의 최우선 가치를 서민의 주택 마련 관련 자금 지원으로 설정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때, 전셋집을 얻거나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노부부가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이나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결혼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도움을 주니 이보다 더 든든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12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접견실에서 만난 임주재(57) 사장은 공사가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를 모토로 삼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보증,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주택연금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설립된 데다 업무 특성상 영업망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누적된 주택보증 공급 규모가 1백60만 가구, 44조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말에는 연간 주택보증 공급액이 출범 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공사가 출범 초기에 겪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쇄신과 개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덕이다. 그 중심에는 단연 임 사장이 있었다.

"남을 칭찬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 고객만족 경영 모토"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요직을 거친 임 사장은 업계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다르게 생각하기'에서 해법을 찾아낸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그는 신용 감독부서 책임자로서 국내 첫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회복 제도의 초석을 닦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작업' 아이디어로 은행을 도왔다.

2008년 7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그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많아 이를 대신 갚아주다 보

니 공사의 보증 재원이 바닥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임 사장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간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부실 공기업'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직원들이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의 미래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에도 공을 들였다. 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를 낮춘 'u-보금자리론'도 출시했다.

예인조복(譽人造福). 남을 칭찬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의미다. 임 사장은 접견실에 걸려 있는 붓글씨를 가리키며 "남을 명예롭게 하고 귀하게 여기면 나에게 복이 온다는 뜻으로 이를 고객만족 경영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주택보증 공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비결은.

먼저 2007년 7월까지 0.125퍼센트였던 16개 시중은행의 출연금 기준요율을 단기대출 0.260퍼센트, 장기대출 0.125퍼센트로 인상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보증 재원인 기본재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보조를 맞춰 서민에게 꼭 필요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증 공급정책을 펴온 것이 주효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전세난이 지속됐을 때 공사가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조치(보증한도 1천5백만원) 시행, 신용회복 지원자 보증한도 확대(1천만원→1천5백만원), 국민주택기금대출 만기 대환상품 개발 등이 좋은 예입니다.

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보증이 없을 때의 은행 신용대출금리(약 10퍼센트)보다 훨씬 저렴한 5, 6퍼센트 정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증료도 1년에 0.2~0.5퍼센트로 국내 보증기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또 은행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고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연금보증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부부가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를 매달 연금처럼 타서 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주택 가격에서 그때까지 타 쓴 연금 총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물려주며,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집 없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증을 서줍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16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 직원은 온라인으로 공사 신용평가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이용해 보증 가부 및 보증한도 등을 즉시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청인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더욱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국민주택기금대출 만기도래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보증한도 인상이나 보증료 인하 등의 우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u-보금자리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보금자리론은 공사가 서민과 중산층이 좀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10~3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없으며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되지 않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이 강점이지요. 특히 u-보금자리론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공사가 직접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금리를 낮추는 등 경쟁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내년 전세시장 전망과 공사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 공급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원이 한정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외에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증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가구주의 인정 범위를 완화하고, 특히 단독 가구주와 결손가정 및 1, 2인 가구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014-8432 www.hf.go.kr

'복권을 삽니다=나눔을 삽니다'

기금의 65% 공익사업에 지원

'복권을 사는 것'은 나눔의 또 다른 실천이다. 액면가 1천원권 복권은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지만 거기에는 '희망'과 '기부'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담겨 있다. 복권을 사면서 당첨을 꿈꾸며 행복할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기복권은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권 발행기관이 점점 늘어 200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각각 복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난립 양상을 빚기도 했다. 수익금도 기관별로 관리해 해당 기관들의 다른 재원과 섞여 사용되면서 복권사업의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던 복권사업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해 1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복권기금이 마련되고 기금과 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할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뒀다. 그러다 2008년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복권 한 장을 판매할 경우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복권 한 장의 수익률은 40.4퍼센트였다. 이는 1천원권 복권을 구입했을 때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은 당첨금과 판매자 수수료, 운영 및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4백4원이라는 뜻이다.

복권기금 6년간 5조8천억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여기에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이 더해지는데 모두 합쳐 올해 조성된 복권기금은 총 9천1백53억원에 이른다. 십시일반의 힘이다.

이 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35퍼센트는 법정 배분사업에, 나머지 65퍼센트는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법정 배분사업은 종전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관이 운

조영철 기자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원이 서울 시내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점심 식사를 돕고 있다(오른쪽).

복권기금은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적극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간 총 5조8천억원이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됐다.

영해오던 사업으로 총 29개 분야로 나뉜다. 공익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장애인, 성폭력 피해아동 및 여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올해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지난해까지 6년간 총 5조8천억원이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조8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됐다. 복권기금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얻은 것이다.

"복권위원회의 기금 관리 운영으로 기금 조성률 향상"

복권은 특성상 다른 상품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복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권위원회가 매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에는 '복권은 사행성이 있다'는 응답이 62.6퍼센트였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0.6퍼센트로 12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절반 이상인 55.5퍼센트는 복권 구매가 '나눔의 한 실천'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원회 김언성 복권총괄과장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기금 조성률 향상은 물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복권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복권위원회 ☎ 02-2150-7816 www.bokgwon.go.kr

웹진 행복공감 www.bokgwon.go.kr/webzine/index.bg

행복공감봉사단

까만 연탄에 '웃음·희망·건강' 가득



복권위원회

11월 30일 오전 연두색 조끼를 입은 행복공감봉사단원 1백50여 명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에서 연탄과 함께 행복을 날랐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조끼를 입은 행복공감봉사단 1백50여 명이 60가구를 찾아 가구당 2백 장씩 총 1만2천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행복 연탄 나눔 및 미리 크리스마스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복공감봉사단은 2008년 복권의 공익적 이미지를 높이려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만든 자원봉사단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함께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건강, 웃음, 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행복공감(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모토로 2008년 제1기가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가 3기째다. 3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은 올해 복권위원회 홍보대사로 활약한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로 봉사단원은 대학생, 직장인 등을 포함해 2천2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발대식을 갖고 봉사단장인 이 씨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농촌봉사와 문화재 보수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봉사활동은 격월로 진행되며 평균 참여 인원은 50~70명 선이다. 활동 계획은 공식 카페와 봉사단원 문자서비스로 공지하고 봉사단 카페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참여 인원을 선발한다.

기수별 봉사단원은 매년 홍보대사를 선정한 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봉사 기간이 만료된 후 단원 가운데 복권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 30명에게는 복권 서포터스(행복공감 나누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복권 관련 뉴스 및 콘텐츠를 수집해 온라인 채널에 전파하고 복권 추첨 방송을 참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봉사활동 참여 신청 : 행복공감봉사단 공식카페 cafe.naver.com/bong4happy



'낮엔 공무원·밤엔 야학교사' 경기도청 이현호 씨

"배움의 길 열어주는 보람 하루가 빠듯해도 뿌듯해요"

많은 공무원들이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손과 발이 돼준다. 그래서 공복(公僕)으로도 불린다. 이들 중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충실함으로, 때로는 업무 이상의 희생과 봉사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두 얼굴의 사나이'로 불리는 경기도청 이현호 씨는 밤이면 늦깎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야학 선생님'으로 변신한다. 어둠을 뚫고 푸른 희망을 그리는 그의 교실은 지금 국사시간이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선사시대요!"

"그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좀 전의 그 씩씩한 목소리들은 다 '오데로' 갔나? 책장과 노트 뒤적이는 소리만 들리는 이곳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건물 2층에 자리한 '푸른빛 평생학교.' 오후 7시를 넘긴 시간. 불을 환히 밝힌 채 국사 수업이 한창이다. 교육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국사 수업을 하는 이현호(45) 씨는 지난 시간 배운 것들을 되짚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다.

퇴근 시각인 오후 6시 무렵 근무처인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난 그는 분명 공무원(행정주사)이었다. 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수업에 참석한 교육생은 2명. 경인방송 자막을 보고 신청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업을 받기 시작한 권옥식(56), 유진선(57) 씨다. 그들은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한 시간 내내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 위해 배움의 연결고리 되고파"

유 씨는 "선생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해줘 국사 공부가 어렵지 않다"며 즐거워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로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꼭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들을 편안하지만 당찬 모습으로 쏟아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한다. 이 씨의 헌신적인 마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생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은 지식뿐 아니라 나눔의 의미까지도 체득한 듯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그가 5년째 야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푸른빛 평생학교(교장 이휘수)는 1986년 청소년 전문 야학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야학에서 공부할 청소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12년 전부터는 주부 전문 야학으로 바뀌었다.

야학 운영비는 매년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문해교육자금 9백만원이 전부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반 등 문자해독 교육을 실시하는 복지관이나 야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이마저 지원 항목이 정해져 나오다 보니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씨는 “지난해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 두 달가량 야학 문을 닫기도 했다”면서 이번 겨울에도 난방비 등이 걱정된다며 얼굴빛이 잠시 흐려지기도 했다.



5년째 푸른빛 평생학교에서 야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호 씨.



지난 5년 동안 이 씨는 하루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다. 휴가철에도 그렇고 연말이면 한 번쯤은 모임이 겹쳐 건너뛸 법도 하지만 야학 수업은 그에게 그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다.

“대학생은 물론 뜻있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가기도 한다”고 말하는 그는 가르치는 일은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통해 어려운 이웃과 생활

3남2녀 중 차남인 이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집안이 넉넉지 않아 일하면서 공부해야 했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근로장학생은 늘 그의 차지였다. 그럼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어려서부터 법관이 되고 싶었고, 공부를 하면서 한때 교사를 꿈꿨으나 여의치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야학에서 그 꿈을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배움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그는 자신이 가르친 교육생 중 수원시내 고교에 입학한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런 교육생들이 고맙다고 찾아올 때면 가슴이 뿌듯하다”면서도 겸연쩍어했다.

선행은 본업에 충실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 씨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경기도 공무원 제안에서 노력상을 수상했고, 전 직원 ‘현답활동’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현답활동이란 현장에 답(現答)이 있으니 현장을 답사(現踏)해 현명한 답(賢答)을 얻으라는 의미다. 또 같은 해 말 실시된 범도민 폐휴대전화기 모으기 실적에서는 4위, 경기도 바로 알기 시험에서는 3위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많은 활동에서도 전력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 그해 12월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의 반바지 등을 경매에 부쳐 많은 모금을 했던 ‘경기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무한돌봄 자선경매’ 행사 아이디어도 그에게서 나왔다.

이 씨는 업무뿐 아니라 야학,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힘든 이웃을 돕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며 수원시 소재 연무초등학교에 급식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매월 청소, 목욕 봉사도 하고 후원회비도 낸다. 이 밖에 크고 작은 후원비를 합치면 매월 기부금만도 그의 월급의 10퍼센트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모범공무원상을 받아 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부인의 성화도 만만치 않을 성싶은데 그는 부인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야학교사며 후원금을 내는 것도 집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힘든 일인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줘 고마울 따름이라고.

이 씨는 가장으로서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며 가족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야학교사 활동 외에도 불우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지난 한 해 3백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왔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데 제가 쓸모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나눔은 물질이나 시간을 뛰어넘은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젊고 건강한 피부미인 되세요"

식약청,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 안내서 발간


조영철 기자

늘어난 주름이나 각질을 걱정하며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성들만이 아니다. 요즘은 동안(童顔) 열풍과 함께 남녀노소 모두 피부에 관심이 많다. 맑고 깨끗한 피부는 동안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부노화 예방법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학적인 피부 상식과 노화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피부의 노화현상과 피부노화 예방법에 대한 안내서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를 발간했다. 피부노화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피부노화 예방법을 활용한다면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도 오랫동안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광노화 예방하려면 자외선 노출 최대한 줄여야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재생 속도가 떨어지고 세포수가 감소하는 등 자연적인 노화와 더불어 자외선 노출, 호르몬 분비의 변화, 나쁜 생활습관 등에 의해 늙게 된다. 노화된 피부의 특징은 피부 건조, 탄력 감소, 주름살 증가, 면역기능 감소에 따른 피부 염증 등으로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피부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광노화에 의한 피부노화는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광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80퍼센트가 18세 이전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잦은 목욕이나 비누 등 세정제의 빈번한 사용은 삼가는 게 좋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는 씻은 후 즉시 피부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부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비타민C, 비타민E 등 항산화제가 함유된 제품이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피부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담배가 피부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면 중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등 피부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연구팀 최보경 과장은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가 피부노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웰 에이징(Well-aging)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는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 02-380-1730~1 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go.kr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cosmetics.kfda.go.kr

육아휴직 땐 月 최고 100만원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3, 4세 유치원비 지원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임금에 비례하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달라진 정률제에 의해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동아DB

달라진 육아 지원책에 따라 서민층에만 적용됐던 보육비 지원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휴직 중 일해도 수당은 나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 기간 내내 일을 놓을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중 일을 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업무 단절을 피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책이다.

맞벌이 월소득 6백만원 이하라면 보육비가 무료!

올해까지는 부부 합산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나 월소득 인정액이 4백98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비 면제가 내년부터는 외벌이 4백50만원, 맞벌이 6백만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0세 36만4천원, 1세 17만5천원, 2세 11만6천원을 직접 지원해준다.

3, 4세 유아도 유치원 학비 지원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백50만원)인 만 5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유치원 학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3, 4세 유아에게도 적용되며 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퍼센트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 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자가양육수당' 금액도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인상되고, 그 대상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월소득 인정액 1백73만원 이하)으로 예년과 같다.

또 3~12개월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나 취업을 한 편부·편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에서 월 4백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G

글 · 이윤진 기자

여성이 행복한 도시 women.seoul.go.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웃이 주인공 된 무대 '문화예술교육 나눔-예술숲 어울림'

"따뜻한 감동, 부푼 희망을 선사"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은 이번 어울림 행사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조개를 판다. 오금이 저린다.
마늘을 심는다. 복숭씨가 애린다.
병원에 간다.
조개 팔고 마늘 팔아도 병원비도 안 된다.
일하기 위해 병원 가는지, 병원 가기 위해 일하는지.
오늘도 절름거리며 텃밭을 가꾼다.

남편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 선 박완선(71) 할머니는 자신이 지은 시 '약이 밥이 되고'를 낭독했다. 평생 밭일로 살다가 말년에 중풍을 맞아 고생한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박 할머니를 비롯한 경남 통영시 사량도 어르신들은 지난해부터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의 '섬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핀' 프로그램을 통해 시 공부를 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시화전과 시낭송회를 열고 문집 〈시가 흐르는 섬〉도 출간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주해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 밖에도 1천여 명의 아마추어 예술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기 포천문화원 다문화어울림 여성합창단의 공연, 강원 춘천시 512 방공포 부대의 시화 전시 등이 펼쳐졌다.

12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나눔-예술숲 어울림(林)' 행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농어촌에서 도시까지, 올 한 해 모든 연령과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이혜림 사무관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받은 일반인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나누는 발표회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알리는 체험 워크숍과 세미나도 열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화예술교육 통해 시낭송·다문화합창단 공연 등 열어

대표 명예교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사진작가 김중만·조세현 씨, 음향감독 김벌레 씨, 영화감독 이명세 씨, 국악 명창 안숙선 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기증품들을 찍어 전시한 '나눔 나무'와 관객이 참여하는 '희망 나무', 아마추어 감독과 출연자가 입장하는 블루카펫 행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올 한 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배려의 하모니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

"DB산업 활성화 위해 민간·공공 협력 중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상생 협력 토론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7백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스마트폰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태블릿PC까지 등장해 앞으로 콘텐츠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앱 개발의 주요한 소스는 바로 데이터베이스(DB)다. 구축된 DB를 이용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 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앱 개발이 요구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DB를 제공하는 DB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DB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DB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4월부터 DB 서비스 시장에서의 민간·공공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DB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DB 서비스 육성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기상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의 기조 발제로 진행됐다. 이후 열린 토론회들은 DB 서비스 분야별 토론회로서 소규모로 마련됐다. 9월 8일 학술DB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10월 26일 특허DB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11월 18일 기상DB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DB산업 발전 위한 과제·정책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

최근 4번의 토론회를 마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기존에 해왔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DB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상생 협력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 한 해 DB 서비스산업의 주요 이슈와 DB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김을동, 김용구, 권성동, 이명수 의원 등 국회 분야별 상임위원들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산업협의회, DB 서비스 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기조 발제 없이 김우봉 건국대 교수의 진행 아래 행정안전부 김회수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과장, 광운대 최영훈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패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공공 간의 DB 서비스 중복 문제, 원천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저작권 문제, 법·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등 그동안 DB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가 얽혔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02-3708-5404 kdb.or.kr

불행을 키우는 습관

글과 그림 · 최영순



만약 당신이 불행하다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이 살아온 삶과 매일매일의 생활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불행의 큰 원인은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 B.러셀

발레로 만나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2010 송년 발레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계 각지의 클래식 공연장에서 상연되는 작품이 있다. 바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로맨스와 흥미로운 모험담 그리고 차이콥스키 특유의 정감 어린 선율이 클래식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선다는 점이 이 작품을 연말의 단골 레퍼토리로 만든 요인이다.

1892년 러시아 마린스키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백20여 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호프만의 동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꼽히는 명작이기도 하다. 거장의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고난도 점프와 회전 등 정통 발레의 화려하고 웅장한 안무, 각 나라 인형들이 왕자와 마리의 결혼식에서 추는 이국적인 군무, 화려한 연주로 호화로운 분위기를 돋우는 꽃의 왈츠, 마리와 왕자의 결혼 2인무 등은 시종일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요정의 춤에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이용해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점이나 피콜로로 표현된 앙증맞은 중국 춤, 현악기와 관악기가 떠들썩한 러시안 춤 등으로 나라별 음악적 특징을 절묘하게 표현한 부분은 언제 들어도 놀랍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살아 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로, '호두까기 인형' 역할을 어린이 무용수에게 맡겨 어린이 관객들이 자신들의 시선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12월 17~25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1300 www.sac.or.kr

●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매진 기록을 세운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이 올해는 부산에서 공연된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꾸는 꿈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일시 12월 16~19일 **장소** 부산시민회관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600-1716 www.wsmi.co.kr

●● 궁중연례악의 정수 〈왕조의 꿈, 태평서곡〉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수원 화성에서 거행한 궁중 연회를 재구성한 공연.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계현순 씨 등 매회 바뀌는 '혜경궁 홍씨' 역할도 볼거리다.

일시 12월 14~24일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3300 citizenhall.busan.kr

●



●●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행복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1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국가를 지키는 1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공정한 사회! 열린 정보! 희망찬 미래!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공정한 사회! 열린 정보! 희망찬 미래!

2010. 12.22(수)-23(목) 10:00-18:00

SETEC 제1·제2전시장 (3호선 학여울역)

www.public-jobexpo.com

- 주요 공공기관 82개 참여
- 취업 특별 명사 강연 / 취업 컨설팅 및 다양한 부대행사

주 최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주 관 KIPF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후 원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BS

